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Online Series

2021. 01. 15. | CO 21-02

홍 제 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 지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 은 이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 은 미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조 정 아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제7차 대회 이후 추진되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과가 부진했음을 인정하며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점, 자립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관리 측면에서 계획경제를 재정비하고,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이다.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정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과 여부 등에 따라 목표 달성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무관하게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문화 부문에 관한 보고 내용을 보면, 역시 제7차 대회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 고강도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화 부문과 관련해서도 향후 정책 운영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에 관한 구상이 갖는 특징과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5개년전략 추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 계획을 제시하는 데 주력

주지하듯이 북한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데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제재 강화의 여파로 2017~201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019년에는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진 2020년 다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도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 2016~2020년 추진된 국가경제 발전 5개년전략(이하 5개년전략)에 대해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여 5개년전략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5개년전략 수행을 통해 자립적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언급도 있지만, ‘실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부진했던 5개년전략 수행 경험을 5개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우선 사업총화보고에서 5개년전략의 목표 달성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총결 기간의 구체적 성과를 열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제7차 대회 보고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회 결론에서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 비판적인 견지에서 냉정하게 분석총화한 것은 총결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못지 않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성과 부진의 요인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적인 대형 악재가 있었던 만큼, 북한 당국은 성과 부진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객관적 조건에 빙자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외부 요인과 함께 5개년전략 내용상의 문제, 과학기술의 역할 미흡, 경제관리체계의 문제 등 대내적 요인도 거론했다. 5개년전략의 목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투자재원과 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식경제강국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점 등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5개년계획 수립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대회의 5개년전략이 야심차고 능동적인 방향의 경제건설을 그리고 있었다면, 제8차 대회의 5개년계획은 현실성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과거 5개년전략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등이 크게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5개년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의 주된 발전 동력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목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불리한 대외 여건과 함께 5개년전략 실패 경험이 주는 교훈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건설: 자립경제에 초점, 현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

이번 5개년계획은 금속공업, 화학공업,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일국 내에서 자기완결적인 생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며, 농업과 경공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금속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은 건설, 기계공업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 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높아졌다. 화학공업 또한 전방연쇄효과(forward-linkage effect), 즉 다른 산업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산업인데, 비료의 경우 특히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자립경제의 두 기둥’으로서 중요하다면, 농업과 경공업은 북한 가계의 소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농업에서는 곡물 생산실적이 양호했던 2019년의 ‘국가의무수매계획’을 향후 2~3년의 단기적 목표로 설정한 점, 노동자에 대한 유인 부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접근이 제시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공업의 경우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강조한 부분은 식료가공업이나 섬유유류업의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들에서도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강조되었다(세부 산업별 목표, 방안, 특징은 <부표 1> 참조).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석탄공업, 경공업, 수산업의 경우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전환을 위한 자원 재배분이 중요하다. 특히 석탄공업의 경우, 원자재와 설비,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유인 제공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대북제재 강화로 수출이 중단된 이후 내수 전환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공업의 경우에도, 대북제재로 산업용 기기의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수입대체 산업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공업이 처한 현상학과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전체 산업 가운데 경제건설의 목표가 ‘수치’로 제시된 것은 살림집 건설과 시멘트 생산 규모가 포함된 건설 부문이 유일하다. 건설, 체신, 국토관리·생태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는 특히,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부분적으로 제8차 대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맞닿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주민생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합영·합작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경제개발구 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같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언급하였던 제7차 대회와 달리, 제8차 대회에서는 대외경제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관광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관한 언급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재 하에서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모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 제7차 대회의 경우, 북한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양호한 시기였다. 대중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에 기반하여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 부양이 이루어졌으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하는 북한식 개혁의 도입으로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부분적으로 제고된 시기이기도 했다. 제7차 대회의 경제건설 내용이 당시의 경제여건에 대한 자신감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면, 제8차 대회의 경우, 대북제재와 보건 위기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고립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5개년전략 추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전반적인 경제건설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제8차 대회의 경제 부문 주요 내용 (제7차 대회와 비교)

		제7차 대회	제8차 대회
경제발전계획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년)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년)
대내경제	중점 산업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 · 농업, 경공업	· 금속, 화학 · 농업, 경공업
	경제관리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국영사업망 발전 · 우리 실정에 부합, 최량화·최적화 위한 경제관리방법
	특징	· 과학기술의 성장 견인 강조	· 재정, 금융, 가격 공간의 활용 강조
대외경제		· 가공품수출, 기술·봉사무역 확대 · 합영·합작과 경제개발구 개발 · 관광사업 활성화	· 관광사업(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경제관리: 계획경제 재정비,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경제관리와 관련해서는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하는 제7차 대회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국영산업망의 발전, 일원화된 통계체계 구축 등 계획경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다. 전체 경제관리에서 북한식 개혁에 대한 언급은 축소되었지만, 기존의 개혁이 일시에 후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개혁 조치들을 이어가되, 자원 배분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는 결론에서만 시범적 조치들의 평가 및 활용,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경제관리 방법의 필요성을 한 차례 언급하였는데, 이는 제7차 대회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당 재정 수입이 확대된 배경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의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석탄공업, 농업 등 개별 산업부문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인 부여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점은 기존 북한식 개혁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물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북한식 개혁을 유지하더라도 자원배분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치들에 대한 미세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산업망의 발전과 ‘급양편의봉사(서비스업)’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유통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계획 부문의 공급이 축소되는 경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확대는 북한 당국의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계획경제의 정비를 강조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변화들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당 재정 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의 발표에서 이미 재정 여건 악화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2020년 북한의 예산수입에서는 주요 수입원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기존에 기업 내에 유보하던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올해 유례없는 보건위기로 생산단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 조세수입 증가율을 축소하고, 이로 인한 예산수입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자 다른 예산수입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재정 전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당 재정 사업 운용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경제관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 금융,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의 활용’을 언급한 부분이다. 국영사업망에 대한 강조가 소비재 유통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정, 금융, 가격’에 대한 언급은 자금순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외화보유고가 감소하여 외화유통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 자원 배분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와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내화와 외화의 유동성을 관리하여 시장의 물가·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내화와 외화의 유동성을 공식 금융제도로 흡수하는 ‘북한식 금융개혁’¹⁾을 추진한 바 있다. 공식 금융제도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목표 자체는 동일하지만, 기존의 북한식 금융개혁이 경제주체들에게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의 접근방식은 국가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한 만큼 화폐개혁 등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큰 극단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5개년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

이번 제8차 대회에서는 5개년전략 추진 경험에서 얻은 교훈, 불리한 대외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등에 근거해 신중하면서 현실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 결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향후 5개년계획을 토대로 경제건설에 많은 예산과 자원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개년전략과 달리 5개년계획은 목표에 준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속·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한 자력갱생 전략이 북한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과 경공업 부문은 자력갱생 전략에 의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중화학공업 부문은 자력갱생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공업 부문의 원료와 설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화학공업 부문의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 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경공업 부문도 같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대북제재라는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긴

1) 황수만·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26권 1호 (2020), pp. 167~197.

하지만, 금속·화학공업 중심의 자력갱생 전략은 북한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이와 관련해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제재 강화 국면에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제8차 대회에서는 제7차 대회 때와 달리 북·중관계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이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를 자력갱생 전략의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8차 대회에서 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해서는 관광사업 활성화만을 언급한 만큼, 코로나19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우선 중국과의 관광 부문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경제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도 관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5개년전략의 실적 부진 원인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 측면에서도 찾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불리한 대외 여건 등도 고려해 계획경제를 재정비하고,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가 내부 역량을 경제에 집중시키는 데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노동자에 대한 유인 부여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이 얼마나 실제 생산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지 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분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신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꾀하기보다는 제재와 코로나 국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버티는’ 데 집중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해 간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급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문화 부문: 성과 부진,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사회통제 강화 예고

제7차 대회 결정서에서 제시됐던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지난 5년이였다.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된 총결 기간(2016~2020년)에 이룩한 사회문화 분야의 성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특히, 제7차 대회에서 과학기술과 교육 부문이 상당한 비중으로 구체적으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제8차 대회에서 평가된 두 부문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응하여 비상방역사업 체계와 토대가 확립되었다는 내용만 간략히 언급하였고, 문학예술 부문의 성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문화 분야에서 성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제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와 정치·군사 부문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다뤄진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제7차 대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국가적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 확립의 내용이 제8차 대회에서 성과로 언급된 것은 눈에 띄는 점이다. 지난해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컸고 국가와 당 차원에서 단기간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피해 복구사업 경험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문화 분야의 목표와 과제들은 새로운 내용 없이 거의 대부분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 제7차 대회와 비교해 사회문화 부분의 비중이 1/3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정책 우선순위 역시 하위로 밀려난 모양새이다.

과거의 사회주의문화강국 건설 대신 ‘새로운 조선식 문명’을 창조하는 사회주의문화의 개화기를 마련한다는 수준으로 총적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의 개선,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 제고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고, 국가적 투자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기관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의 개건사업과 더불어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처할 방역기반의 구축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새로운 개화기’의 실현이 촉구됐고, 출판보도 부문에서 보도, 방송, 언론의 역할 강화가 강조됐다.

한편, 사회주의생활양식 및 혁명적준법기풍 확립 과업에 대한 강조는 향후 주민 생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8차 대회에서는 생활양식 측면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의 근절과 함께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대중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준법기풍의 확립과 함께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의 역할이 강조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제정에 이어, 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와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부표 1> 세부 산업별 목표, 실현방안, 특징

부문	목표	방안	특징	
중심 과업	금속	주철 생산체계 완성/철강재 생산 확대	주요 제철소·제강소 개선/에너지절약형 제철로 건설/ 선철 생산에 갈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수입대체 산업화
	화학	기술역량 강화/화학제품 생산 확대	첨단기술 개발 적용/국산 원료 사용	구체적 방안 언급 없음
	농업	곡물생산목표 달성/식량자급자족실현	종자혁명과 과학농사/새땅찾기와 간척지 개간/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농업근로자 유인부여를 위한 지원 강화	향후 2~3년 2019년 '국가의무수매계획' 달성 구체적 방안 다양하게 언급/노동자 유인 제공
	경공업	국산화, 재자원화, 현대화	선질후량 원칙/신제품 개발	수출 내수 전환/구체적 방안 언급 없음
전력	전력생산 증대	조수력발전소 건설/핵동력 공업 창설	핵동력 공업 창설이 등장	
석탄	석탄증산	원자재, 설비, 노력과 자금 보장 강조/채탄장 확대/유연탄 공업 발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생활조건 개선	수출 내수전환/노동자 유인 제공 언급	
기계	현대화, 능률화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 전환 제시	수입대체 산업화/구체적 방안 언급 없음	
채취업	생산증대	채취(지질탐사 역량 강화/광산, 제련소, 공장 생산능력 확대)/ 입업(통나무 수요 보장/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		
교통운수	철도현대화/철도수송수요보장	철도(안전성, 증량화/표준궤길구간 연장/평양지하철의 기술개건현대화)/ 륙해운(대형선박 건조, 자동차통합운수 관리체계, 대중교통수단 생산 확대)	구체적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	
건설 건재공업	살림집건설 확대 시멘트생산 확대/마감건재의 자급자족	살림집(평양시 5만 세대, 김덕지구 2만 5천 세대)/ 건재(시멘트공장 개건 및 신설/마감건재 생산기지 구축)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조 수입대체 산업화(마감건재)	
체신	기술혁신	이동통신기술 발전/유선방송, TV방송체계 정비		
상업	국영상업망 발전/서비스업의 사회주의성격 복원	상업봉사활동전반의 국가 주도/인민성, 문화성, 현대성, 다양성 구현		
국도관리 생태환경	인민 생명·건강 보호	생태환경 조사,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범과 세칙 마련/자연재해 대응 위한 치산치수사업/도로건설관리/동서해안건설 사업 추진	구체적 방안 다양하게 언급	
도시경영	인민생활 개선	살림집보수/수질개선/공원유원지 환경개선		
수산업	현대화, 과학화	수산사업소와 선박수리기지 조성, 수산자원보호/양어양식 확대	인민식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 규정 수출 내수전환	